

2017년 지방직 사회 문제와 해설(B책형)

법과정치 1~5번, 16~20번(10문제)
사회문화 6~10번(5문제)
경제 11~15번(5문제)

1. 오늘날 국제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문제 등이 부각되었으나, 안보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 ② 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다.
- ④ 국가 간 경제 격차로 동서문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VI.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문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탈냉전 이후의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냉전 시대에서의 이념 갈등 인한 분쟁이 탈냉전 이후에는 인종·민족·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쟁의 양상이 변화한 것뿐입니다.
- ② (X) 오늘날 환경, 보건, 인권 등의 국제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국가의 문제이자 국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③ (O) 1992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의 원인을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규정하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97년 12월에는 '기후 변화 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지구의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의 책임인데 선진국에게만 의무를 부담시키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그 의무에서 제외된 점 등 그 불평등성을 이유로 그 비준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12월에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인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되었던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협정이라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 분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채택	1997.12. 채택, 2005년 발효	2015. 12. 12.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
대상 국가	주요 선진국 37개국	195개 협약 당사국
적용 시기	2020년까지 기후 변화 대응 방식 규정	2020년 이후 '신 기후 체제'를 규정
주요 내용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책임을 분담, 협약은 구속력 있음
한계	미국의 비준 거부, 캐 나다의 탈퇴, 일본·러 시아의 기간 연장 불 참 등	2016년 9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 령은 파리협정을 '행정명령'으로 비준하였으나, 2017년 6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함

- ④ (X)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제는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가 사이의 발전 및 소득격차에서 생기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남북문제'라고 합니다. 한편 '동서문제'는 냉전시대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립의 문제를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헌법에서도 보장된다.
- ②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 ④ 정당은 공직 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당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② (O) 헌법 제8조 제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X)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8조 제4항).
- ④ (O) 정당은 여론을 형성·조직하여 정부에 전달하거나,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합니다.

3. 다음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갑~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있지만, 사유재산제로 인해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 을 : 자연 상태에서 사적 소유권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회계약에 동의하고 정부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들은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 병 : 개인들은 자신들이 갖는 자연권을 제3의 주권자들에게 양도하면, 그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 ①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이 가장 크다.
- ② 갑과 을은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을과 병은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인식하였다.
- ④ 갑, 을, 병 모두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I.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계약설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사유재산제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갑은 ‘루소’, 저항 권을 인정하는 을 ‘로크’, 자연권의 전부 양도를 인정하는 병은 ‘홉스’입니다.

- ① (O) 병(홉스)은 자연권의 전부 양도를 인정하고, 을(로크)은 자연권의 일부 양도(또는 일부 위임)를 인정하는 반면, 갑(루소)은 자연권의 양도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홉스)이 가장 큼니다.
- ② (X) 을(로크)은 입헌 군주제를 인정하였지만, 갑(루소)은 직접 민주제를 주장하였습니다.
- ③ (X) 갑(루소)과 을(로크)은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인식한 반면, 병(홉스)는 자연 상태를 개인에 대한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습니다.
- ④ (X) 갑(루소)과 을(로크)은 국민 주권론을 주장한 반면, 병(홉스)은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4. 다음 표는 시대별 민주 정치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질문	답변		
	(가)	(나)	(다)
보통선거권이 보장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대의제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가?	예	아니요	예

- ① (가)에서는 공직자를 추천이나 윤번제 등으로 총원하였다.
- ② (나)에서는 입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었다.
- ③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나)에서 (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다)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I.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보통선거권이 보장되는 (다)는 현대 민주 정치에 해당하고, 대의제가 인정되는 (가)는 근대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 ① (X) 공직자를 추천이나 윤번제 등으로 총원한 것은 (나)의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입니다. (가)의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제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였습니다.
- ② (X) (나)의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된 것은 맞지만, 입헌주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③ (X)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의 선거권 취득을 위한 운동으로 (가)의 근대 민주 정치에서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된 (다)의 현대 민주 정치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④ (O) (나)의 근대 민주 정치와 달리 (다)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되었습니다.

5. 다음 표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A국의 의원 선거 결과이다. A국의 선거 및 정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비례 대표는 정당의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구분	지역구		비례 대표	
	선거구 수	의원 정수	선거구 수	의원 정수
전국	500	500	1	50

- ① 지역구 의원은 결선 투표로 선출된다.
- ② 다당제보다 양당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 ③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만으로 결정된다.
- ④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제도 - 대표제(당선자 결정 방식)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A국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상대 다수 대표제)는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결선 투표는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 1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1차 투표의 1,2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투표를 말합니다.
- ② (O) A국의 의회는 전체 의회 의원 정수(550명)의 대부분인 500명이 지역구 의원에 해당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당선되므로, A국의 의회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일 가능성이 큼니다.
- ③ (X) A국 의회는 총 의석수(550석) 중 비례대표 의원 정수인 50석만 정당 득표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 ④ (X) A국의 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6.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A는 계량화된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 ☐ B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 <보 기> —————
- ㄱ. A는 측정이나 실험을 통한 구체적 가설 검증을 중시한다.
 - ㄴ. A는 실증적 방법에 입각한 연구를 통한 결론 도출에 적합하다.
 - ㄷ. B는 해석적 연구를 통한 보편적 법칙 발견에 적합하다.
 - ㄹ. B는 직관적 이해보다는 통계화된 자료의 수집을 더 중시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①

[출제 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vs 해석적 연구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문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라는 것은 ‘법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인간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B는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ㄱ.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법칙을 발견해내는 연구 방법입니다.

ㄴ. (O) 앞서 설명한 것처럼 A는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ㄷ. (X) B가 ‘해석적 연구’라는 부분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법칙 발견에 적합’한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ㄹ. (X) 통계화된 자료의 수집을 중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의 특징입니다.

[당부의 말] 사회 문화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 ㄷ선택지처럼 한 문장 안에 옳은 내용과 틀린 내용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보면 당연히 틀린 내용인데, 마음 급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잘 안 보이냐 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놓으면 정답률이 뚝! 떨어지니 출제자는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확보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러다보니 별것 아닌 녀석이 하나의 출제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틀려서 이렇게 짜증나는 문제도 없는데, 수험생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내면 거기에 맞게 연습하는 거지. 공시 사회 초창기에는 이렇게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 문화 문제 풀 때는 선택지 읽을 때 하나하나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온갖 정성을 들어서 경제 문제 하나 맞춰놓고 이런 문제 하나 틀려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경제 문제도 1문제고, 사회문화 문제도 어차피 1문제이니깐요.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인은 ㉠햄버거의 등장이라고 하면 흔히 미국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햄버거가 미국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햄버거의 기원을 몽골의 유라시아 원정 때부터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 몽골의 고기를 갈아 먹는 문화가 러시아로 전해진 후, 러시아인은 생고기를 갈아 다진 양파와 낱달걀을 넣어 타르타르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그것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전해진 후,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형태로 미국에 전해졌다. 햄버거가 미국에 전해진 초기에는 일반인 대다수가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맛과 간편성에 주목한 ㉣청소년과 하층민들이 햄버거를 즐겨 먹게 되었고, 이후 여러 햄버거 체인들의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다.

- ① ㉠은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 발견에 해당한다.
- ② ㉡은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 ③ ㉢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 ④ ㉣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하위 문화이다.

[정답] ④
[출제 단위]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에서 햄버거가 ‘등장’했다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합니다.
- ② (X) 문화 지체라는 것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서 ‘햄버거가 미국에서 유입’된 것은 문화 전파에 해당할 뿐이지, 문화 지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X) 강제적 문화 접변이란 정복이나 식민 통치의 경우처럼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는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미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④ (O) ㉣에서 햄버거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청소년과 하층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 양식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햄버거가 미국 사회에서 하위 문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8. 사회 집단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학교는 2차 집단이며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② 시민 단체는 이익 사회이며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③ 종친회는 1차 집단이며 공동 사회에 해당한다.
 ④ 대기업은 공식 조직이며 자발적 결사체이다.

[정답] ①
[출제 단위]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대학교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간접적이고 비인격적인 접촉이 중심이 되는 2차집단입니다. 또한 결합의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이익 사회입니다.
- ② (X) 시민단체가 이익 사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특정한 공식조직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으로 분류됩니다.
- ③ (X) 종친회는 공동 사회가 아니라 이익 사회입니다. 아버지 쪽의 친족집단을 의미하는 ‘종친’은 공동사회겠지만 종친끼리 결성한 ‘종친회’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이익 사회에 해당합니다.
- ④ (X) 대기업이 공식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결성된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9.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	아니요	예
(나)	예	아니요
(다)	A	B
(라)	C	D

- ①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 ② (나)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이 해당할 수 있다.
- ③ (다)의 질문이 “기초연금제도가 해당하는가?”라면 A는 ‘아니요’, B는 ‘예’이다.
- ④ (라)의 질문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면 C는 ‘아니요’, D는 ‘예’이다.

[정답] ③
[출제 단위]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X)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은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 다 “예”라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 ② (X)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나)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사회보험에서는 “아니

요”, 공공부조에서는 “예”라는 답변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공부조를 받는다는 것은 가난을 공인받는 것이니 나쁘게 표현하면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아빠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 만일 너희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놀리거나 티를 내거나 차별을 하면 아빠는 매를 들거야.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돼. 그건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공공부조 받는 아이를 차별하고 놀리기도 하거든요.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난은 죄가 아니야. 그것이 드러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당당해져야지!”라는 얘기는 아이들에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그 상황에서 당당해지기가 쉽습니까? 아...오늘은 해설지 쓰는데 왜 이렇게 감성이 터지냐....?ㄷㄷ

③ (O) 기초 연금 제도는 표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거 공공부조니까 절대 헛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수험생이 헛갈려하는 거 아니까 출제자가 자주 써먹거든요. 이 얘기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강조했던 것인데, 출제자가 이번에도 이걸 타겟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네요. 암튼, 기초 연금은 공공부조니까 (다)의 질문이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고 하면 A는 ‘아니요’, B는 ‘예’가 돼야 합니다.

④ (X)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 보험입니다. 따라서 (라)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C는 ‘예’, D는 ‘아니요’가 들어가야 합니다.

10. 다음 표는 갑, 을, 병 세 나라의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자녀와 부모 계층의 일치 및 불일치 비율>

(단위 : %)

자녀의 계층	갑국		을국		병국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부모와 일치	부모와 불일치
상층	7	3	18	2	12	8
중층	24	6	4	6	42	18
하층	54	6	56	14	16	4
합	100		100		100	

- 갑국의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 을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적다.
-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과 하층을 합하면 중층보다 많다.
- 세 나라 모두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은 부모가 상층일 때 가장 많다.

[정답] ②
[출제 단위]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계층 구조(자료분석형 문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우선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갑국을 보세요. 자녀의 계층 상층 중 부모와 일치하는 경우가 7%, 부모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3%입니다. 갑국 자녀 전체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상층이 10명인데, 그 중 7명은 부모도 상층이라는 것이고, 3명은 부모가 중층이나 하층이었는데 상승이동해서 상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 (X) 갑국의 자녀 세대는 상층 10%(7+3), 중층 30%(24+6), 하층 60%(54+6)입니다. 따라서 갑국의 자녀 세대는 ‘상층<중층<하층’의 구성 비율을 보이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 (O) 을국의 상층에서 부모와 불일치한 2%는 부모가 중층이나 하층이었는데 ‘상승이동’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하층에서 부모와

불일치 한 14%는 부모가 중층이나 상층이었는데 ‘하강이동’한 경우입니다. 중층에서 부모와 불일치한 6%는 부모가 상층이었다면 ‘하강이동’한 것이고, 부모가 하층이었다면 ‘상승이동’한 경우입니다. 이 6%가 어떤 이동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6%가 모두 상승이동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승이동은 8%(2+6)로 하강 이동 14%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실히 을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X)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상층에서 8%, 하층에서 4%로 합치면 12%입니다. 중층의 경우 18%인데 이것은 상층과 하층을 합친 12%보다 큰 숫자입니다.
- (X)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의 비율은 갑국에서는 3%로 중층(6%), 하층(6%)보다 적습니다. 을국에서는 2%로 중층(6%), 하층(14%)보다 적습니다. 병국에서는 8%로 중층(18%)보다는 적고, 하층(4%)보다는 많습니다.

11. 다음 표는 재화 A~D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될 경우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위 : %)

구분	A	B	C	D
판매 수입 변화율	-10	0	6	10

<보 기>

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재화는 A이다.
 ㄴ. D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재화이다.
 ㄷ. A와 D의 수요량 변동률은 동일하다.
 ㄹ. B는 C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② 판매 수입 = 가격 × 판매량(수요량)

이에 따라 A~D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각각 추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재 : A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수요량(판매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Ed > 1$)**입니다.
- B재 : B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입이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Ed =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C재 : C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므로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수요량(판매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작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0 < Ed < 1$)**입니다.
- D재 : D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한 비율과 판매 수입이 증가한 비율이 같으므로 수요량(판매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요량 변화율이 0%이므로, D재 수요의 가격 탄력

- 성은 **완전 비탄력적($E_d=0$)**입니다.
- ㄱ. (O) 위 결과에서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ㄴ. (O)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D재는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므로,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 ㄷ. (X) 가격이 상승할 때 A재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D재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재와 D재의 수요량 변동률이 동일하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ㄹ. (X) B재는 C재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큼니다.

12. 다음 표는 A국의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 억 달러)

	2015년	2016년
상품 수지	100	110
서비스 수지	200	210
(가)	10	-20
이전 소득 수지	-20	10

- ①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
- ② A국은 상품의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
- ③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가)에 포함된다.
- ④ A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 수지표의 이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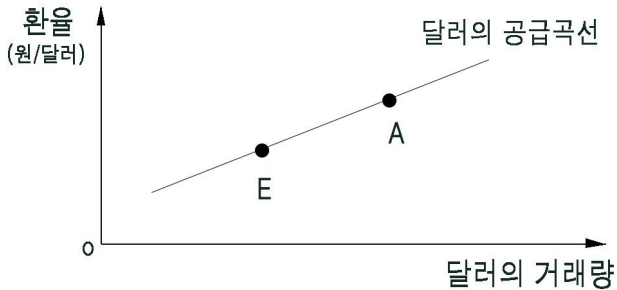
- ① (X) 상품 수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품 수출액 **증가폭**이 상품 수입액 **증가폭**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례와 같이 나타날 경우 상품 수지는 1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증가하지만,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에 비해 작게 나타납니다.

구분	2015년	2016년	증가율
상품 수출액	120억 달러	150억 달러	$25\% \left(= \frac{150 - 120}{120} \times 100 \right)$
상품 수입액	20억 달러	40억 달러	$100\% \left(= \frac{40 - 20}{20} \times 100 \right)$

- 따라서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② (X) 국제 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를 의미하고, 수출입 규모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품 수지나 서비스 수지가 크다고 하여 상품의 수출입 규모나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크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A국에서 상품의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큰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③ (O)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되므로, (가)는 본원 소득 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본원 소득 수지(가)의 지급 요인에 해당합니다.
- ④ (X) 이전 소득 수지는 국가 간의 무상 원조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출연금이나 해외 유학생 및 교포에의 송금 등도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A국의 이전 소득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

었다는 이유만으로 A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선지와는 반대로 A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라면 이전 소득 수지는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A국이 외국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라면 이전 소득 수지는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다음 그림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외환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외환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 ① 한국의 이자율 상승
- ②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
- ③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 위축
- ④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요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외환 시장의 균형점이 E에서 A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① (X) 한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한국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져 한국 금융 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달러 공급 증가)하거나, 미국 금융 상품에 대한 한국인의 투자가 감소(달러 수요 감소)할 것입니다. 즉,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외환 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O) 미국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므로,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는 달러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외환 시장의 균형점이 E에서 A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③ (X)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는 외환 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X)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외환 시장의 균형점을 E에서 A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평소 한식 요리에 관심이 있어 요리학원에 ㉡수강료 1백만 원을 내고 요리를 배워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갑은 회사를 사직하고 한식 전문 요리점을 차리려고 한다. 갑이 알아본 결과 1년 간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할 경우, 매출 1억 5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시설 보수비 1천만 원, 재료비 7천만 원이 발생한다.

- ① ㉠은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이다.
- ② ㉡은 갑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매몰비용이다.
- ③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1억 1천만 원이다.
- ④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합리적 선택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할 경우의 수입,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 매출 1억 5천만 원
명시적 비용	◦ 인건비 3천만 원 ◦ 시설 보수비 1천만 원 ◦ 재료비 7천만 원
암묵적 비용	◦ 연봉 6천만 원
매몰비용	◦ 수강료 1백만 원

- ① (X) 명시적 비용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고, 암묵적 비용은 다른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연봉 6천만 원(㉠)은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명시적 비용)이 아니라,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수입(암묵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 ② (X)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강료 1백만 원(㉡)은 갑이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 한식 전문 요리 전문점을 운영할 것인지의 선택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매몰비용에 해당합니다. 매몰비용은 합리적 선택에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선택의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③ (X)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1억 1천만 원과 암묵적 비용 6천만 원을 더한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 ④ (O) 합리적 선택은 수입(편익)이 기회비용에 비해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할 경우 수입은 1억 5천만 원이고, 기회비용은 1억 7천만 원이므로 이 경우 갑은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5. 다음은 갑국의 고용 관련 상황이다. 갑국 정부의 정책시행 결과 고용 지표 관련 인구 중 감소한 것은?

갑국의 실업률은 매우 양호하지만,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갑국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었다.

- ① 취업자 수
- ② 실업자 수
- ③ 경제활동인구
- ④ 비경제활동인구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변화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① (X) 고용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문제의 사례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었는데 고용률은 높아졌으므로,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X) 취업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①의 해설과 같이 취업자 수는 증가했는데, 문제의 사례에서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비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항상 100%이므로, 취업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실업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실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X) ②의 해설에서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 (O)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나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입니다. 문제의 사례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하였는데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할 것입니다.

16. 다음은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갑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갑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 인정에 법원의 심판을 필요로 합니까?	⇒ 아니요	

- ① 갑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② 갑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권리만 얻는 행위는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④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거래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IV. 개인생활과 법

[출제영역] 제한 능력자 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심판이 없어도 제한 능력자로 인정되는 ‘갑’은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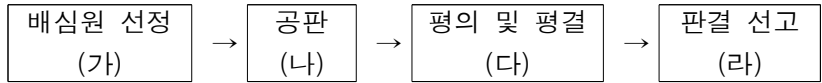
① (X)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② (X) 미성년자인 갑이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갑) 측의 취소권이 부정됩니다(민법 제17조). 판례는 미성년자가 ‘단순히 행위 능력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 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꾸며서(위조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박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갑의 법정 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X)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인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O)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아직 행위 능력자(성년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는 확답촉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17. 다음은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하나의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이 재판 절차를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 ② (가)의 배심원은 만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 ③ (나)는 지방법원 본원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④ (다)의 평결은 (라)에서 법원을 기속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된 그림의 재판 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 제도인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해당합니다.

- ① (O)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 ② (X)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다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등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고, 대통령, 국회 의원·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③ (X) 국민 참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④ (X)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의 평결에 법원이 구속되는 경우 피고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A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정이 ㉢재심에서 내려졌다. 이 판정은 ㉣초심인 ○○지방법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회사의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 ① ㉢은 ㉡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 ㉠은 ㉢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 ③ ㉢은 A회사의 노동조합이 신청하였다.
- ④ A회사는 ㉡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부당 노동 행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A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 오프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

- ① (X)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는 먼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초심(㉠)절차는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절차’이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재심(㉢)절차는 ‘중앙 노동 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 ② (X) 중앙 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 A회사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A회사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 ③ (X)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중앙 노동 위원회가 초심(㉠)인 ○○지방법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회사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은 A회사 노동조합이 신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인 ○○지방법 노동 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A회사에 유리한 결정이므로 A회사(사용자)는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④ (X)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또는 노동조합)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A회사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 판정(㉡)에 불복하는 A회사는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19. 다음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A, B, C가 있다. 우선, A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B가 조각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B가 조각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서 C가 조각되는지를 확인하고, C가 조각되지 않을 경우에 범죄가 성립된다.

- ①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 ② A를 충족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 ③ 경찰관이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B가 조각된다.
- ④ 강요된 행위와 정당방위는 모두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형식적 범죄 개념의 세 가지 요소인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그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① (O)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에 해당합니다.
- ② (O) 구성 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둔 것이므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표현합니다.
- ③ (O)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이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④ (X)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C)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책임(C)이 아니라 위법성(B)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20. 다음의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보 기> ————
ㄱ.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의 보장
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ㄷ. 대의제의 채택
ㄹ. 최저임금제의 실시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I.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헌법 제1조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은 소수의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에 있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ㄱ. (O)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 투표권 등의 참정권의 보장 및 이와 관련한 민주적인 선거 제도의 보장은 ‘국민 주권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ㄴ. (O)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은 ‘국민 주권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ㄷ. (O)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함에 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대통령, 국회 의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직접 민주제(국민 투표)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제의 채택도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ㄹ. (X) 최저임금제는 국민의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로써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